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 *

이 준 용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우리말 초록

‘경향성(tendentiousness)’이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이다. 언론의 경향성이란 사안에 대한 개별 기사의 논조, 편집국의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언론사의 전반적인 편집 방향 등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지칭한다. 경향적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선별적으로 강조하거나 윤색적이다. 경향적 기사의 내용은 ‘틀 지워져(framed)’ 있으며, 정보원과 인용문이 선택적이다. 경향적 기사의 논조는 사안의 의미, 중요성, 관련성 등과 관련해서 편향을 드러낸다. 요컨대 독자의 이해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사를 경향적 기사라 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의 경향성은 사실, 논설, 의견기사, 탐사기사, 피쳐 등은 물론 일반 사실 기사, 심지어 스트레이트 단신에서도 발견된다.

시민들은 언론의 경향성을 인식하고 있다. 언론재단이 2008년 5천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우리 언론의 정치적 편파성, 사회적 편향성, 자사 이기주의 등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정파성, 편향, 자사 이익추구 등은 모두 경향성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69%가 신문기사가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국민 이익보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데 68%, ‘부유층과 권력층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데 66%가 동의했다. 방송뉴스에 대한 평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데 63%, ‘선정적이고 흥미위주로 편집한다’에 61%, 그리고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에 61%가 동의했다.

언론인들은 이런 경향성에 대처하기 위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라는 고전적 언론 규범을 준수하면 된다고 말한다. 경향성이란 결국 사실 기사에 가치, 이념, 주장, 판단이 개입하면서 발생하므로, 사실 기사에는 가치, 이념, 주장, 판단 등을 배제한 채 오직 사실만을 제시하면 된다는 논리다. 또한 특정 가치, 이념, 주장, 판단 등이 개입된 의견을 제시하는 기사라면 그것이 의견 기사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경향적 의도의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의견과 사실의 분리에 대한 보도준칙을 담고 있다. 제 3조 1항에 의하면,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언론현실을 보면, 사실과 의견의 분리 준칙은 너무나 참담하게 위반되고 쉽게 무시된다. 일부 언론인은 심지어 이 준칙을 정당한 윤리 규정이나 규범으로 존중하고 있지 않다. 언론인들 중에는 분명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기자들이 있지만, 동시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 기자들도 있다. 심지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없으며, 결국 그것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렇듯 사실과 의견의 분리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만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논의나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글에서 나는 한국 언론의 경향성을 교정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보도할 것’이라는 전통적 언론 규범을 확장해서 ‘참과 옳음에 대한 타당성 주장을 구

분해서 응답할 것'을 주장한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것을 주장하는 전통적 규범은 두 가지 전제를 포함한다. 첫째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함으로써 언론의 경향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 번째 전제는 불가능하며, 두 번째 전제는 필연적이지 않다. 따라서 얼핏 보면, 나는 사실과 의견의 분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착을 범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다고 해서 언론의 경향성이 완화되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쓸데없이 불필요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당착과 무용함을 극복하고 일관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이 글의 과제이다.

이 글은 결국 고전적인 언론 규범인 '사실과 의견의 분리'와 관련된 철학적, 언론학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것을 '언론의 진술적 언행과 규범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주장의 구분'으로 확장시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이런 확장을 통해서, '사실과 가치의 분리'의 무리함이나 '사실과 의견의 분리'와 같은 언론인의 아이러니를 피해서 언론 윤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언론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참과 옳음에 대한 타당성 주장의 구분'으로 확장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언론의 '진술적 언행과 규범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주장에 응답할 의무의 구분'이 된다. 언론은 때로 외적 사건과 사실에 대한 '참과 거짓(true or false)' 여부를 결정하는 진술적 언행을 수행하며, 때로 공동체의 안녕과 선에 대한 '옳거나 그름(right or wrong)' 여부를 결정하는 규범적 언행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 두 언행에 대해 요구되는 타당성 주장의 내용이 다르며, 따라서 언론이 이런 요구에 응해서 수행해야 할 윤리적 과제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구분을 혼동하거나, 제기된 타당성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언론의 도덕적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해서, 한국 언론에 흔히 나타나는 경향적 특징을 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 기사로 잠정적으로 구분해서 검토하고, 그런 경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언론 윤리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려 한다.

=====

*) 이 글의 초고는 2009년 5월 1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 '무너지는 사실보도와 의견보도 원칙'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정 토론해 주신 성병욱, 김재욱, 김경호, 김경호 님, 그리고 발표문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모든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